



기 획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발 행 대전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발행일 2025년 11월
 문 의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042.530.3500



QR code
 홈페이지(www.dsi.re.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대전안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집과 일터, 우리의 삶을 담는 도시 공간...

매일 머무는 일상 공간은 친숙한 공간으로 때론 편안하고 익숙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의 일상 공간은

기후변화와 물류 유통의 집적화, 전기·배터리 기반의 신 이동수단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도시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크고 작은 위험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유난히 차가운 공기에 따스한 온기를 찾고싶은 겨울 자락에서

2025년 하반기 대전안전 매거진 주제는 화재입니다.

대전시 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과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추이를 살펴보고

대전시가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주요 화재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및 예방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신종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하여

대형 화재 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우리집에서 대전시민이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과

화재예방 수칙도 살펴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심 속 화재 안전, 익숙함을 넘어

대전시민 모두의 안전을 이야기 합니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장 양승희

「대전안전」은 대전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대전안전」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안전」에 게재된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 + 화재

05 대전시 화재 발생 현황

10 대전시 주요 피해 현황

12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현황

14 대전에 살고있는 우리,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요?

16 대전형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채진_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20 노후 배관의 경고음,

대전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투자 제안

조성_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24 소방시설 점검관리 매뉴얼, 사용법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28 우리 집 안전 지키는 화재예방 수칙

김병국 소방경_대전광역시소방본부

대전시 안전 + 2025 위험분석네트워크

30 대전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DSN + Daejeon Safety News

34 대전시 안전센터 소식

홍보 + 대전시 안전 홍보물

38 시민안전보험

39 화재피해주민 지원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처 대전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인 대전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

042-530-3500, www.dsi.re.kr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불은 한 순간이지만 대비는 매 순간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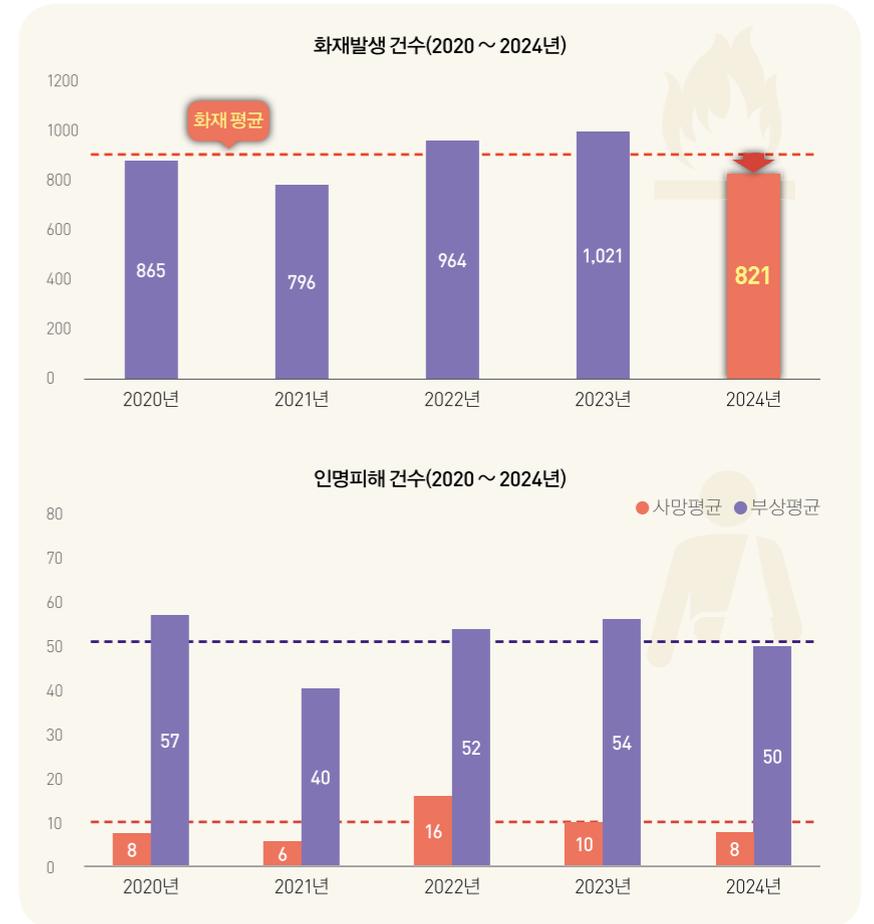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화재는 도시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화재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는 작은 실천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전시 화재 발생 현황



1. 대전시 최근 5년간 화재현황



연도별	구분	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 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24년		821	58	8	50	7,223,754
2023년		1,021	64	10	54	186,172,612
2022년		964	68	16	52	24,455,505
2021년		796	46	6	40	8,626,140
2020년		865	65	8	57	7,590,112
합계		4,467	301	48	253	234,068,123

- **(화재건수)**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467건으로 재산 피해액 약 2,340억 원 규모
- 2020년 865건에서 2023년 1,0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4년에는 821건으로 감소
- **(인명피해)** 2024년에 58명(사망 8명, 부상 50명)으로, 전년도 64명 대비 9.4% 감소
사망자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부상자는 감소 추세를 유지
- **(재산 피해)** 2020년부터 재산 피해 규모 상승 추세에서 2024년 재산 피해액 약 72억 원으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함
- 대전시의 화재 재산 피해는 대형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연도별 변동 폭이 높음

※ 2022년, 2023년 재산 피해는 대형화재(현대아울렛, 한국타이어) 영향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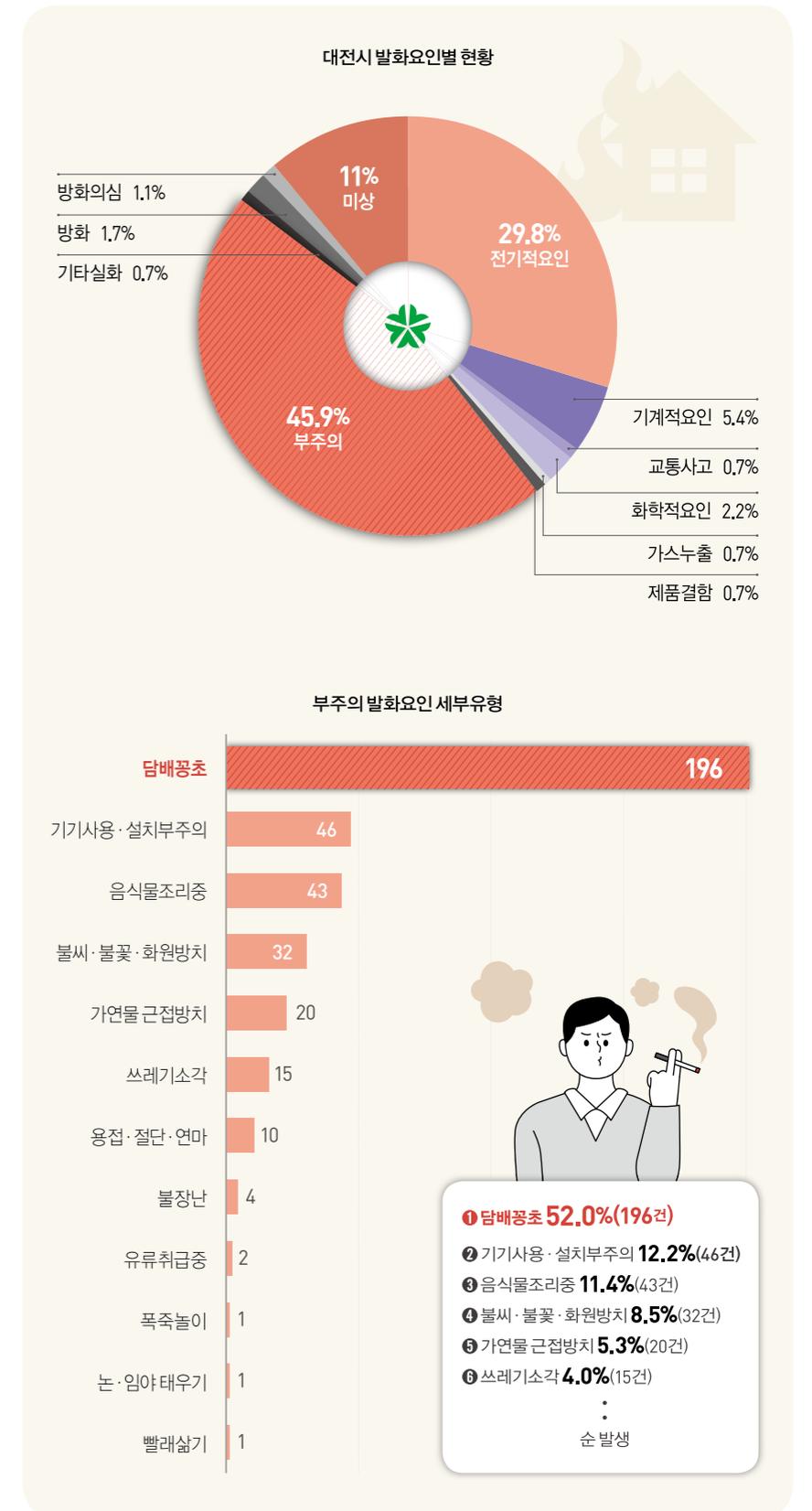
대전시 화재 발생 현황

2. 발화요인별 화재현황

- 대전은 전국 대비 원인 미상 화재비율이 다소 높음(+2.8%)
- 발화요인 유형 중에서 발화요인별 현황은 부주의 45.9%(377건)로 가장 높은 발생 비율 차지
- 부주의(45.9%) > 전기(29.8%) > 미상(11.0%) > 기계(5.4%) > 방화·방화의심(2.8%) > 화학(2.2%)



구분	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제품 결함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의심	미상
전국	37,614	10,559 (28.1%)	3,819 (10.2%)	183 (0.5%)	964 (2.6%)	139 (0.4%)	398 (1.1%)	16,918 (45.0%)	517 (1.4%)	346 (0.9%)	369 (1.0%)	324 (0.9%)	3,078 (8.2%)
서울	5,654	1,536 (27.2%)	264 (4.7%)	29 (0.5%)	55 (1.0%)	20 (0.4%)	20 (0.4%)	3,063 (54.2%)	53 (0.9%)	8 (0.1%)	51 (0.9%)	38 (0.7%)	517 (9.1%)
부산	2,281	522 (22.9%)	126 (5.5%)	16 (0.7%)	41 (1.8%)	12 (0.5%)	11 (0.5%)	1,271 (55.7%)	11 (0.5%)	50 (2.2%)	28 (1.2%)	24 (1.1%)	169 (7.4%)
대구	1,205	323 (26.8%)	161 (13.4%)	3 (0.2%)	12 (1.0%)	6 (0.5%)	12 (1.0%)	460 (38.2%)	5 (0.4%)	8 (0.7%)	17 (1.4%)	15 (1.2%)	183 (15.2%)
인천	1,318	430 (32.6%)	152 (11.5%)	5 (0.4%)	49 (3.7%)	10 (0.8%)	13 (1.0%)	476 (36.1%)	20 (1.5%)	3 (0.2%)	19 (1.4%)	20 (1.5%)	121 (9.2%)
광주	688	151 (21.9%)	106 (15.4%)	2 (0.3%)	7 (1.0%)	0 (0.0%)	6 (0.9%)	290 (42.2%)	4 (0.6%)	1 (0.1%)	18 (2.6%)	8 (1.2%)	95 (13.8%)
대전	821	245 (29.8%)	44 (5.4%)	6 (0.7%)	18 (2.2%)	6 (0.7%)	6 (0.7%)	377 (45.9%)	6 (0.7%)	0	14 (1.7%)	9 (1.1%)	90 (11%)
울산	709	190 (26.8%)	56 (7.9%)	6 (0.8%)	13 (1.8%)	2 (0.3%)	11 (1.6%)	291 (41.0%)	16 (2.3%)	5 (0.7%)	7 (1.0%)	1 (0.1%)	111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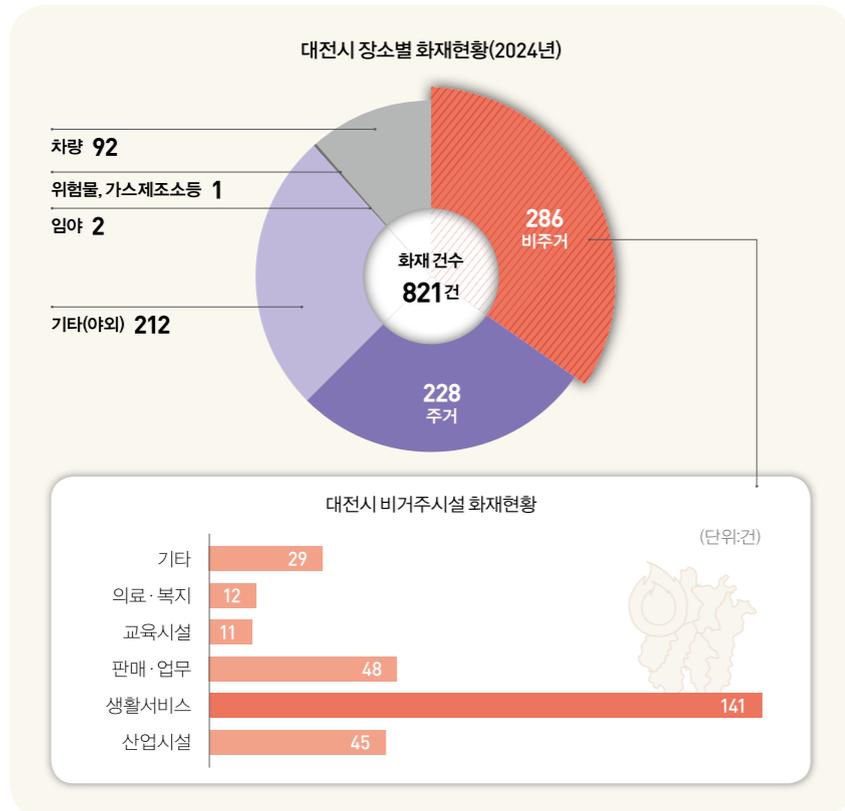
대전시 화재 발생 현황

3. 장소별 화재현황

- 대전은 전국 대비 기타야외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음(+6.4%)
- 장소 유형 중에서는 비주거시설이 34.8%(286건)로 가장 높은 발생 비율 차지
- 비주거(34.8%) > 주거(27.8%) > 기타(25.8%) > 차량(11.2%) > 임야(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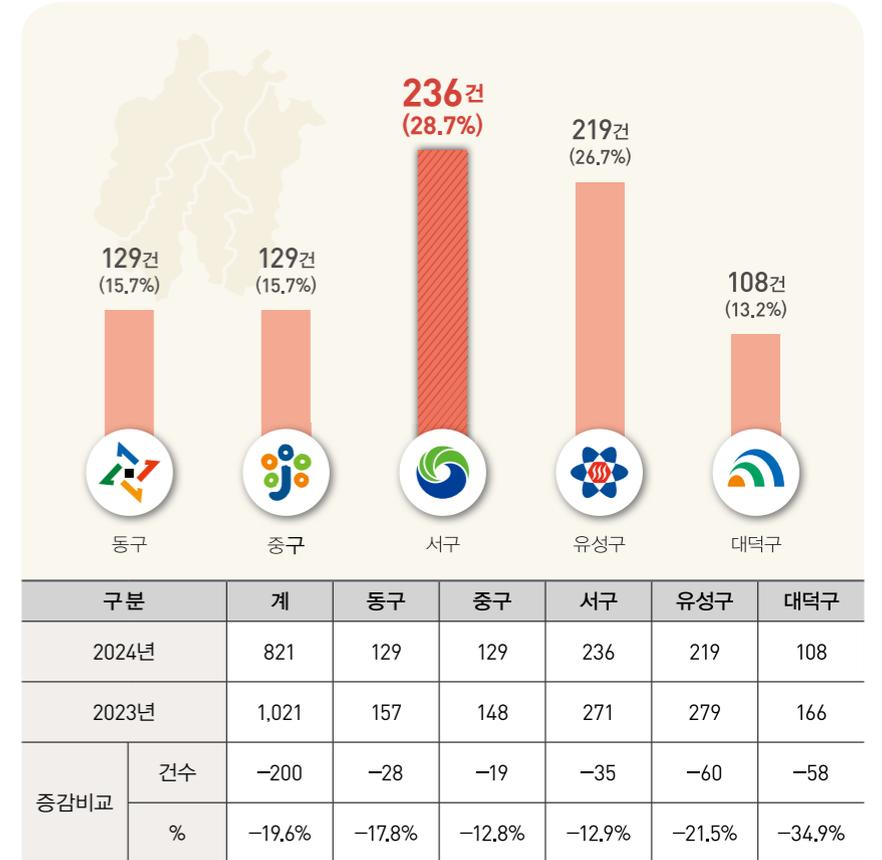
(2024년/건수)

구분	화재 건수	주거	비주거	자동차	위험물	임야	기타(야외)
전국	37,614	10,436 (27.7%)	13,948 (37.1%)	4,831 (12.8%)	29 (0.1%)	977 (2.6%)	7,293 (19.4%)
서울	5,654	2,241 (39.6%)	1,986 (35.1%)	402 (7.1%)	0 (0.0%)	0 (0.0%)	14 (0.2%)
부산	2,281	777 (34.1%)	790 (34.6%)	201 (8.8%)	2 (0.1%)	14 (0.6%)	10 (0.4%)
대구	1,205	332 (27.6%)	520 (43.2%)	171 (14.2%)	0 (0.0%)	0 (0.0%)	17 (1.4%)
인천	1,318	370 (28.1%)	556 (42.2%)	204 (15.5%)	1 (0.1%)	5 (0.4%)	22 (1.7%)
광주	688	234 (34.0%)	270 (39.2%)	98 (14.2%)	1 (0.1%)	0 (0.0%)	8 (1.2%)
대전	821	228 (27.8%)	286 (34.8%)	92 (11.2%)	1 (0.1%)	2 (0.2%)	212 (25.8%)
울산	709	180 (25.4%)	251 (35.4%)	97 (13.7%)	4 (0.6%)	3 (0.4%)	13 (1.8%)



4. 자치구별 화재현황

- (화재 건수) 서구 236건(28.7%) > 유성구 219건(26.7%) > 동구·중구 129건(15.7%) > 대덕구 108건(13.2%)
- 대덕구의 경우 전년 대비 34.9% 감소,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임



- (인명 피해) 5개 자치구 중 중구 24명(사망 3, 부상 21)과 서구 12명(사망 5, 부상 7)의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재산 피해) 재산 피해는 유성구가 약 47억 2,236만원으로 소실 면적 대비 재산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4년)

구분	인명 피해(명)			재산 피해(천원)			소실 면적(동,㎡)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동수	면적
계	58	8	50	7,223,754	2,347,606	4,876,148	214	13,707
동구	7	0	7	430,165	220,238	209,927	37	8,881
중구	24	3	21	375,380	238,687	136,693	42	692
서구	12	5	7	653,415	305,961	347,454	49	923
유성구	6	0	6	4,722,368	1,243,266	3,479,102	41	1,732
대덕구	9	0	9	1,042,426	339,454	702,972	45	1,479

대전시 주요 피해 현황



1. 대전시 시설별

주요 화재사건
(2018~2023년)

- 주거시설 화재**
 - (2022년)월평동 아파트 화재: 에탄올 화로 부주의취급 화재로 7명 부상
 - (2023년)서구 복수동 아파트 화재: 원인미상 화재로 3명 부상
- 산업시설 화재**
 - (2018년)한화공장폭발 화재: 로켓 추진체 폭발로 인한 근로자 3명 사망, 2명 전신화상
 - (2023년)한국타이어공장 화재: 연면적 8만6700㎡의 제2공장과 타이어 21만 개가 전소되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 전체 피해건수는 1,064건으로 집계
- 생활서비스/ 판매·업무시설 화재**
 - (2022년)현대아울렛 화재: 지하주차장에서 발화된 불로 근로자 7명 사망, 1명 중상
 - (2023년)대덕구 오정동 LPG 가스폭발 사고: 건물붕괴 및 12명 부상, 20가구 피해
- 교육시설 화재**
 - (2023년)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 화재: 한 실험실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이나 2명이 연기를 흡입
 - (2024년)KAIST 산업디자인학과 화재: 학과 실험실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

※ '2024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 발생률은 '대학'이 24.8%로 가장 높았고, '연구기관'(17.3%), '기업부설연구소'(1.2%) 순으로 나타남
- 기타 화재**
 - (2023년)서구 산직동 산불: 금산군 지랑리부터 서구 산직동까지 확산된 산불로, 산불영향구역은 752ha로 집계되었으며 53시간 만에 진화됨



2. 대전시 역대

주요 화재사건
(1985~2023년)

• 대전시 10대 인명피해 현황

(사망자)부상자) 재산 피해 순

구분	일시	발생장소	인명피해			재산 피해(천원)		화재원인
			계	사망	부상	부동산	동산	
1	2022.09.26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8	7	1	18,698,513	1,216,160	부주의
2	1989.07.24	대덕구 오정동 주택	8	6	2	1,050	1,950	방화
3	1989.12.31	중구 석교동 주택	5	5	0	300	450	가스폭발
4	1985.01.26	중구 대흥동 숙박시설	10	4	6	725	5,000	전기합선
5	2006.06.30	대덕구 신탄진동 숙박시설	9	4	5	71,488	21,030	부주의
6	1996.06.07	대덕구 중리동 주택	4	4	0	2,000	3,500	방화
7	2003.03.06	대덕구 비래동 주택	4	4	0	2,608	2,090	난로과열
8	2005.09.26	유성구 외삼동 공장	9	3	6	3,557	146,333	화학적 폭발
9	2010.04.06	유성구 송강동 아파트	5	3	2	20,328	2,592	미상
10	2004.06.20	중구 오류동 아파트	4	3	1	36,075	20,325	미상

• 대전시 10대 재산피해 현황

구분	일시	발생장소	인명피해			재산 피해 (백만원)	화재원인
			계	사망	부상		
1	2023.03.12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주)	1	0	1	176,346	미상
2	2022.09.26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8	7	1	19,914	부주의
3	2014.09.30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주)	0	0	0	15,545	미상
4	2014.04.28	대덕구 대화동 (주)아모레퍼시픽	0	0	0	13,794	미상
5	1996.10.07	유성구 원내동 (주)충남방직	0	0	0	12,220	전기적요인
6	1992.12.11	유성구 원내동 (주)충남방직	10	0	10	4,863	분진폭발
7	1997.06.08	대덕구 대화동 (주)한양	0	0	0	4,528	전기적요인
8	2001.05.01	동구 가오동 남대전 변전소	1	0	1	3,621	미상
9	2020.06.10	대덕구 대화동 에이엠티 공장	1	0	1	3,414	미상
10	2023.06.17	유성구 전민동 수자원연구원	0	0	0	2,556	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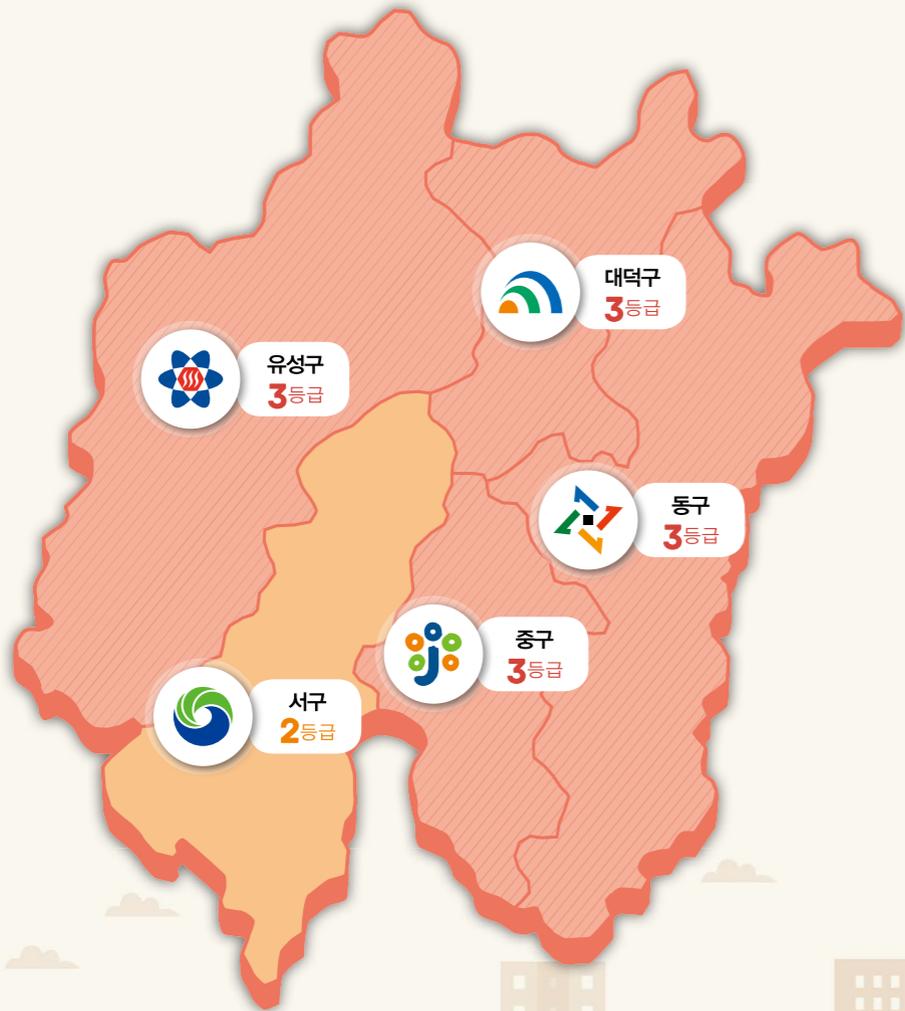


대전시 구별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24년)

직전년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시도, 시군구 구분 1~5등급 부여(1등급일수록 안전)

매년 12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등급을 공개

* 분야별 5개 등급으로 공표. 1등급 일수록 동일 행정구역 단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



2024 대전시지역안전지수 구별 지표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안전등급	3	3	2	3	3
위해	4	2	3	4	4
취약	4	4	2	1	4
경감	2	2	3	3	3
의식	3	3	2	2	2

위해지표(50%)

- 인구만명당 환산 화재사망자수

취약지표(10%)

- 인구만명당 노후 건축물수
- 인구만명당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경감지표(20%)

- 소방정책예산액 비율 (전체 세출 결산액 대비 소방 정책사업비 세출 결산액)

의식지표(20%)

- 인구만명당 화재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 기준연도 대비 소방 안전교육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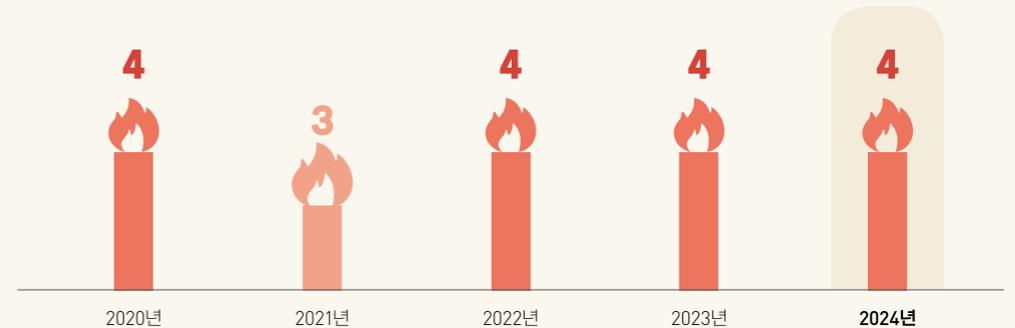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지역안전지수 등급 기준의 위해·취약·경감·의식지표를 반영한 대전시 구별 현황

- 최근 5년간 대전시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평균 4등급 수준 유지
- 대덕구는 24년 기준 3등급으로 작년대비 1등급 개선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등급현황(2020~2024년)

대전시 안전등급		자치구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24년	4	3	3	2	3	3
2023년	4	3	3	2	3	4
2022년	4	3	3	2	2	4
2021년	3	4	3	4	2	4
2020년	4	4	5	2	4	4

연도별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추이





대전에 살고있는 우리,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안전한 대전, 함께 만드는 도시.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연구원·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STEP1. 화재 현황 : 특·광역시

2024년 특광역시 평균 화재는 1,810건이 발생했으며, 대전은 821건으로 특광역시 중 광주와 울산 다음으로 적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STEP2. 유형별 주요 화재 : 산업시설

대덕구 산업단지 내 생산·제조시설의 연이은 두차례 화재는 약 2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STEP1. 화재 현황 : 대전시

하지만 최근 5년간 대전의 평균 재산피해액은 총 468억원에 달하며, 매년 50여 명의 부상자와, 10명 가까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STEP3. 정책 대응

대전시는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조기 감지 시스템, 다중이용시설은 대피 매뉴얼과 훈련 강화, 산업시설은 정기 점검과 스마트 예측 시스템으로 대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STEP2. 유형별 주요 화재 : 산불

2023년 산적동 산불은 무려 752헥타르를 태우며 5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STEP4. 화재 원인

담배꽂초, 전기·기기 사용 부주의 같은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2. 유형별 주요 화재 : 다중이용시설

2022년 유성구의 대형상업시설 화재는 7명 사망, 1명 부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STEP5. 화재 예방

점검과 예방, 작은 실천들이 모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담배꽂초 불씨 확인
- 음식물 조리시 자리 비우지 않기
- 낮은 배선과 피복 수시로 체크
-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대전형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채진_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오늘날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화재예방은 소방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대전지역의 대형화재 위험요인과 그 예방법을 제시한다.



들어가며

최근 화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화재는 단 시간에 건물을 집어삼켰고,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화재로 소방관의 대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07시 39분경 00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는 199억 1천4백만 원에 달했다.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 차량 하부에서 최초 발화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지하 1층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의 화재발생 현황은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역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형화재의 위험성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근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도처에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규와 건축법규 등의 규제를 받아 소방 설비와 방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소방법규나 건축법규에 의거 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가 부과되고, 소방관서 등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곳곳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소방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정이나 소방대상물에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계인이 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안전교육을 통한 화재 예방 지식을 숙지시키고 화재예방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이 제도화되고 소방시설의 사용방법을 반복적으로 숙달한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채진, 2023).

이 글은 대전광역시 사례를 분석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대형화재는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를 말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전지역도 00아울렛 화재와 유사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요인과 예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대전시 고층건물



대전시 고층 아파트

대전광역시는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174동(아파트 153동, 복합건물 21동)으로 전국의 2.67%를 차지한다.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와 소방관의 진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진압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형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므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대책이 요구된다. 소방기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방대상물은 시설 관리와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 잠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난동선에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초고층건물 화재시 자동소화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초고층 건물의 자동소화시스템을 고의로 정지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물류창고



2023년 대전한국타이어 물류창고 화재



“
 작동 불가능한 이론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에서 작동 가능한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대전 유성구에 많은 물류창고가 들어서고 있다. 랙크식·복층구조 창고는 화재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고, 신축현장에서는 유독가스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물류창고와 신축공사장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기관은 정기적인 순찰과 화재예방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화기, 가연물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속하게 작동하는 방재시설의 설치유지가 중요하다. 초기 감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정 감지설비를 설치하고, 대형창고, 랙창고의 특성에 맞는 감지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분야는 물론 보안분야 등까지 기본적으로 인원의 출입관리, 시설현황, 작동원리, 비상대응 조치 등 통합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역시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진압방법은 전기자동차를 간이 수조 등에 넣어 통째로 냉각시켜 배터리 열폭주의 연쇄 반응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조 설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좁은 골목이나 지하공간에서는 설치 자체가 어렵다. 국외 전기자동차 주요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주변 가연물로 번지면서 재산피해가 커졌다. 전기자동차가 충전 중 또는 충전 후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202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 기업 연구실 폭발사고

최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많은 공장 과 연구소 등이 입주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공장·연구·실험실이 밀집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불에 잘 탈 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발생 시 대피로를 차단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폭발사고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소방기관은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컨설팅, 화재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맺음말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전지역의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10개소로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밀집, 밀폐된 공간으로 창문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창층 구조이며, 다중이 밀집한 공간이다. 또한 연기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영화관은 외부와 거의 차단되어 있어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반 화재에서 볼 수 있는 화재의 성장 단계(발화기-성장기-플래시오버-최성기-쇠퇴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의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연소열이 축적되기 쉽고,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발생하는 대형재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형재난의 원인을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안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줄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학중심에서 인문학 중심으로, 이론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안전불감증 중심에서 제도 개혁 중심으로, 화재 진압 중심에서 피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작동 불가능한 이론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에서 작동 가능한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이 이론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혀 비상상황 발생 시 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재난은 공학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세월호의 선장,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기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문학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채진, 2021).

구체적인 화재예방 실천방안으로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가스, 휘발유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는 점화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집 앞에 잘 타는 물건이 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가족과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채진, 2020).

참고 문헌

- 대전광역시(2025), 2024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 채진(2023), 화재통계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지수 개선방안, 지식과 교양, 11, 93-122.
- 채진(2021), 소방정책학, 윤성사.
- 채진(2022), 화재진압론, 동화기술.
- 채진(2020), 화재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4(3), 100-109.

사진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8942>)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213023300063>)

노후 배관의 경고음 대전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투자 제안

조성_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대전은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35%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배관망 부식과 더불어 전기·가스·피난체계 등 복합적 안전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정책은 생활편의 중심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화재안전설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밀 안전진단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화재안전대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1. 대전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의 심각성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도시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 둔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고, 이는 대전시의 도시 구조와 생활양식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주거 자산은 노후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고, 화재안전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의 도시개발 집중 시기(1990년대)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동주택 세 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이미 노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건축적 노후화가 아니라, 화재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직결된다.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과 대피 지연으로 인명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라는 사실은 곧 도시 안전의 근본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구 둔산·월평지구의 대단지는 준공 당시 최신품 설비를 갖춘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주요 설비가 내구연한을 넘어 성능 저하가 두드러진다. 중구·동구의 원도심 지역은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해 있고 관리 사각지대가 많다. 대덕구는 공업지대와 인접한 낡은 공동주택이 혼재해 화재 발생 시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며, 유성구도 안신도시는 2010년대 이후 준공된 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같은 대전 안에서도 구별 안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대전시 공동주택 준공연도별 현황(2025년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현황 자료 재구성

2. 보이지 않는 위험

공동주택 화재안전은 단일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기설비의 노후화는 배선 피복 손상과 콘센트 과열로 이어져 가장 빈번한 화재 원인이 되며, 가스·연료 사용의 관리 미흡은 오래된 가스배관의 부식이나 연결부 파손과 맞물려 폭발적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에 피난통로 관리가 부실하여 계단과 복도에 적치물이 쌓이거나 비상구가 잠겨 있는 경우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커지고, 노후 단지에서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경보음이 들리지 않는 등 경보·감지설비의 성능 저하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마지막 보루는 스프링클러다. 그러나 이 장치의 성능은 '배관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혈관에 달려 있다. 대전시 노후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대부분 야연도금 강관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부식이 누적되어 수압 저하와 막힘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녹과 스케일이 쌓여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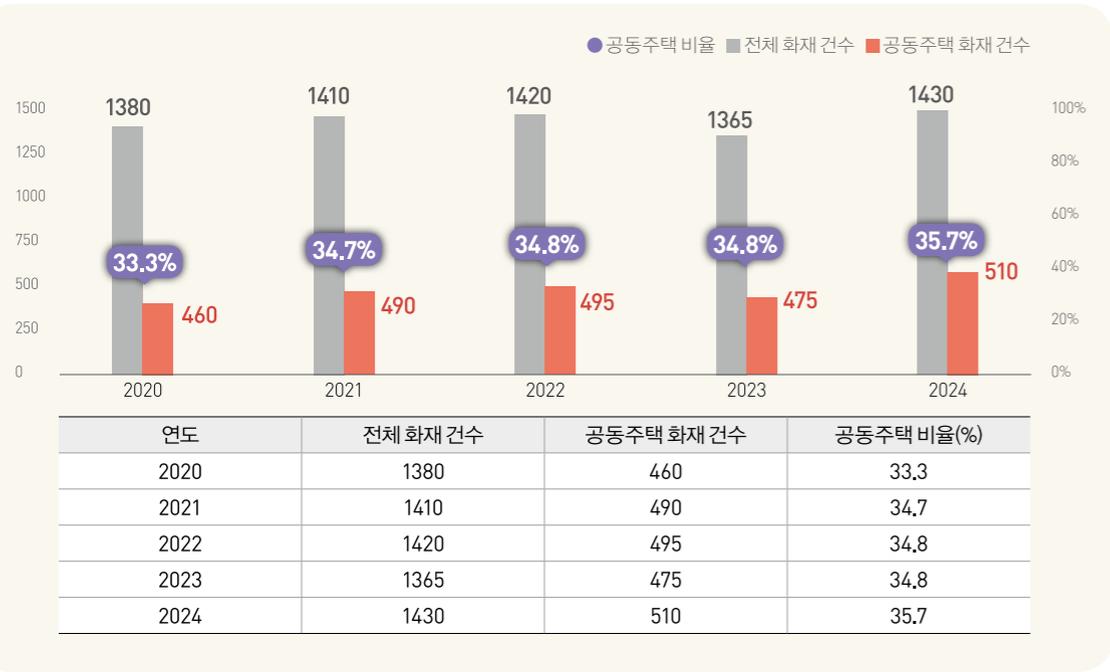
실제 대전에서도 우리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 2022년 대덕구의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작동했으나 배관 수압이 약해 충분한 방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배관 내부 부식으로 관통 단면이 좁아져 있었음이 확인됐다. 다행히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불길만 번쩍었다면 참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사례는 대전 시민 모두에게 노후 배관 교체의 절박성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안전은 단일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배선·가스·피난·경보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적 위험 구조다. 대전의 경우 노후 아파트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3. 대전시의 정책 현황과 통제가 주는 경고

대전시는 현재 각 구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보강을 지원한다. 서구는 연간 약 20억 원, 중구와 동구는 각각 10억 원 내외, 대덕구는 8억 원, 유성구는 15억 원 수준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대체로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주민 생활편의성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소방·전기·가스 같은 화재안전설비의 교체나 성능 개선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표2. 최근 5년간 대전시 화재 발생 추이



출처: 대전소방본부 화재통계연감(2024 재구성)

항목이 아니어서,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심사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그마저도 '눈에 보이는 편익'에 밀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연감(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 건수는 약 1,400건이며, 그 중 공동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이는 전체 화재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명 피해는 공동주택 화재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 화재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전은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과 밀집된 주거 환경은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결국 화재의 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부 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시설 개선을 지원 항목에 명시하고, 실제로 화재안전 분야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023년에는 종로·영등포 등 노후 주거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교체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노후 공동주

택 안전개선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해 배관 교체와 전기설비 보강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소방시설 교체를 지원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안전을 단순한 보조항목이 아니라 독립된 지원 카테고리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반면 대전은 아직 화재안전설비 교체를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부속 항목으로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동일한 예산 구조 속에서도 '우선순위 설정'의 차이가 대전과 다른 도시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4.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전략

대전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 우선순위의 재설정이다. 지금까지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도로 보수나 놀이터 정비 등 눈에 보이는 편익성 위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스프링클러 배관망, 전기·가스 설비, 경보·감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최우선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종합적 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이다. 준공 2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소방·전기·가스·피난

화재 안전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에서 출발한다. 낡은 배관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진단은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에게 위험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셋째,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이다. 현재 구청별로 분산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를 '대전시 공동주택 화재안전 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별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넷째, 자원 조달의 다변화이다. 시비와 구비만으로는 대규모 교체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비 매칭을 확대하고, 장기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보험사와의 협력 모델을 개발해 화재위험 저감을 위한 공동투자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이다. 안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주민 스스로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며, 비용 부담의 일부를 공유할 때 정책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 설명회와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도시의 미래로서 안전

화재 안전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에서 출발한다. 낡은 배관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 대전은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도시다. 화재안전 취약성이 누적되는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스프링클러 배관망 부식 문제는 단지 그 시작일 뿐이며, 전기·가스·피난·경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안전정책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더욱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최근의 화재 통계와 사례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더 나아가 도시 경쟁력의 본질이다. 인구 감소와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는 정주성과 인구 유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지금 대전이 내려야 할 결단은 단순히 화재 예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과의 약속이자 도시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2024). 2024년 공동주택 현황 자료. 세종: 국토교통부.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2024). 화재통계연감 2024. 대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2025).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청.
- 서울특별시(202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2024). 노후 공동주택 안전개선 특별지원사업 계획. 부산: 부산광역시청.
- 광주광역시(2024).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 광주: 광주광역시청.
- 행정안전부(2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2023~2027). 세종: 행정안전부.
- 대한건축학회(2022).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 저하 연구. 서울: 대한건축학회.
- 한국화재보험협회(2023). 공동주택 화재사례 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소방안전원(2022). 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소방안전원.

사진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901>)



소방시설 점검관리 매뉴얼, 사용법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출처_고용노동부

작은 점검이 큰 화재를 막습니다.
매년 한 번, 우리집 안전을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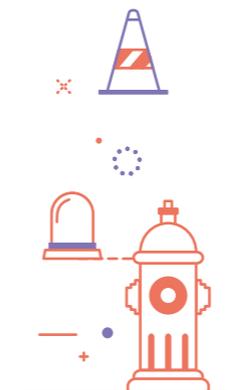
우리집 점검 항목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설비		피난설비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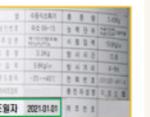
소화기

설치장소_현관문 근처, 거실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출입문 부근)에 두기
- 용기 변형·손상·부식 확인
- 안전핀 체결 확인
- 지시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구역에 있는지 확인
-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교체



축압식 소화기



제조일자 표시

내용연한: 2031.01.01

내용연한 표시

자동화산소화기 (천장형 소화기)

설치장소_보일러실, 세탁실, 다용도실 천장부

- 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확인
- 지시압력계 정상여부 확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

설치장소_주방 후드 안쪽, 가스레인지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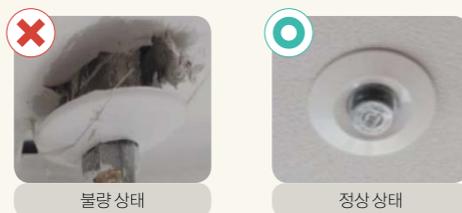
- 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녹색) 여부 확인
- 수신부의 전원표시등 점등 여부 확인



스프링클러 점검

설치장소_거실·방·복도 천장부 중앙부

- 헤드 변형·손상·탈락 여부 확인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감지기)

설치장소_각방, 거실, 복도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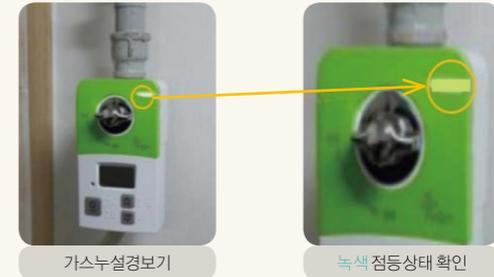
- 감지기 변형·손상·탈락 여부 확인



가스누설경보기 점검

설치장소_가스배관, 가스레인지 근처

- 가스누설경보기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확인



완강기 점검

설치장소_발코니 또는 대피공간 내부 벽면

- 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 확인
- 완강기 외형의 변형·손상·부식 여부 확인
-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확인





우리 집 안전 지키는 화재예방 수칙

김병국 소방경_ 대전광역시소방본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 주택에서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시 소방본부 김병국 소방경과 함께 가정 내 화재 예방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가정에서 주로 어떤 이유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나요?

A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전기적 요인, 부주의, 난방기구, 전열기구 사용 후 전원 차단 안 한 경우입니다.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전기 과열'입니다. 가정용 멀티탭에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쓰거나 충전하다 보면 발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Q 전동키패드 배터리를 집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A 최근 3년간 대전에서 전동키패드 화재가 23건이나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4명 나왔고, 재산피해도 6천만 원이 넘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중 과열·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통풍 잘 되는 베란다 같은 곳에서 충전하시고요, 외출하거나 주무실 때는 절대 충전 상태로 두시면 안 됩니다. 또 배터리가 부풀거나 손상된 게 보이면 바로 점검을 맡기셔야 합니다.

Q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난다는 얘기도 많던데, 원인이 뭘까요?

A 최근 3년간 대전에서 김치냉장고 화재가 43건 있었고, 그중에 사망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2005년 9월 이전에 나온 뚜껑형 구형 모델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전기부품 노후나 절연 손상, 냉장고 뒷면 먼지 쌓임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불이 나는 겁니다. 오래된 김치냉장고는 꼭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반려동물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네,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40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주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터치 버튼을 눌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레인지 주변에 가연성 물건을 두지 말고, 실리콘 패드나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노인이나 어린이는 화재 시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A 대피 속도가 느리거나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만큼 피해 위험이 큼니다. 평소에 학교나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화재 발생 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어린이는 되도록 혼자 두지 않기, 노인 가정에서는 음성 안내 화재감지기 설치 등도 도움이 됩니다.

Q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24년 기준으로 연간 화재가 821건 발생했습니다. 그중 주거시설에서 난 화재가 227건으로 약 28% 정도를 차지해요.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25명, 재산피해는 9억 6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연말연시, 냉난방 기기 사용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Q '화재는 초기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바로 "불이야!" 외쳐 가족들에게 알리신 뒤 119에 신고하세요. 불이 작을 땐 소화기로 끌 수 있지만, 불이 이미 커졌다면 대피가 우선입니다. 대피할 땐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으로 문 온도를 확인해야 하고,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무리해서 대피하지 말고 119에 위치를 알려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가정 내 화재예방 수칙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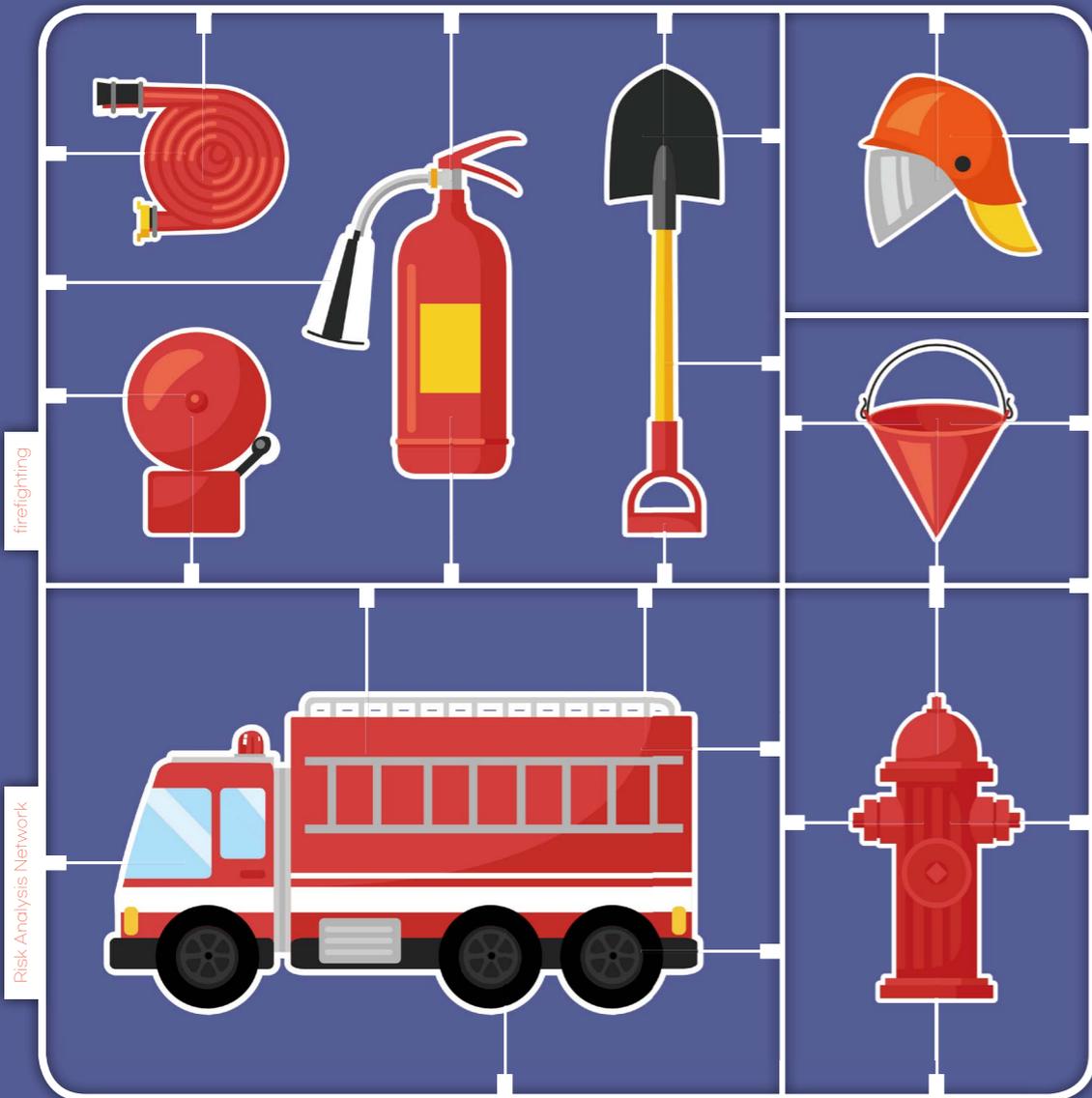
A 가장 기본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노후 전선 교체, 리튬 배터리 충전 시 외출 금지'입니다. 또 소화기는 한 집에 최소 한 대 이상은 두시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니까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화재 시 대피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의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는 '설마'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평소 준비가 가장 큰 예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대전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

최근 대형물류창고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현대아울렛, 2023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사례는 대형화재가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이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건축·소방·정책·심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주경 센터장



면적 중심 규정에서 성능 중심 화재안전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물류창고의 대형화·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785개소의 물류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대전만 해도 4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철골조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산이 매우 빠르고, 층고가 높아 소방 접근이 어렵습니다. 현재의 건축법·소방법은 사양 중심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동화된 구조나 적층랙(메자닌) 같은 최신 창고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구조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분류체계와 소방관 진입창·방화셔터 기능을 강화한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광대학교 조성교수

대형화재 대응의 핵심은 '사고 학습체계'입니다.

대형화재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이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청은 행정 지원과 자원 배분을, 소방은 현장 지휘를 맡는 식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는 단순 원인분석을 넘어 '사고 성찰형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대아울렛과 한국타이어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혼선과 한계를 복기하며,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연구원 신우리 책임연구원



강화된 기준이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새로 강화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창고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 시 기준을 유도하는 행정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내장재를 비가연성 자재로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박찬석 교수

성능 설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식'입니다.

물류창고의 개방형 구조는 방화구획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스프링클러만으로는 대형화재를 진화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성능 검증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 대상의 실무형 안전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대전소방본부 김병국 소방경

특수물질 화재 대응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물이나 가스에 소화로도 진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화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물질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행안부·소방청 등 다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은경 부센터장

재난은 물리적 복구만큼, 심리지원도 중요합니다.

화재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는 시민이 많지만, 초기 복구 단계에서는 '심리지원'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할 수 있기에, 재난통합심리지원단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전시 사회재난과 송지선 주무관

시설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차별화하고, 산불이나 복합 재난까지 고려한 통합 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유철 과장

대형화재 대응의 핵심은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재산피해는 보험으로 복구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난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대응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노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물류창고의 대형화·자동화에 대응한 성능 중심 화재안전기준 마련 필요
- 기존 창고시설·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능 보강 및 단계적 적용 필요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난 중심' 화재대응체계 전환
-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강화
- 리튬이온 배터리 등 특수물질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 재난 초기단계에서의 심리지원 개입 제도화
- 시민·근로자 대상 실천형 화재안전교육 확대



지금까지 '대전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2회 위험분석 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형화재의 핵심은 인명피해 예방이며,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2025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개최

일시: 2025. 6. 20. 장소: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대전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열고, 총 79명의 어린이를 안전히어로즈로 위촉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찾아내고 신고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 참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활동 취지와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히어로즈 위촉장 수여, 안전생활 실천선서,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신문고 사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들은 앞으로 '어린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신고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예정된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안전골든벨,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안전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세중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주도하는 안전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활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회 제공, 안전관련 행사 초청, 우수 어린이 표창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일시: 2025. 9. 3. 장소: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대전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자치구, 공사·공단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재난 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교육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비롯해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13개 협업 기능 주관 부서 재난 업무 담당자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 재해 복구 정책의 이해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불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잇따르고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재난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집합교육 외에도 시 인재개발원의 재난안전 전문과정 신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안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최종 회의 개최

일시: 2025. 9. 17. 장소: 중구청 별관 6층 회의실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 중구지역의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 제고를 위해 상반기 1~2차 회의에 이어 17일 3차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시 안전정책과와 중구청 재난안전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컨설팅사업'은 대전시 지원을 통하여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자치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자치구나 현재의 양호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중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실무자 대상 컨설팅 수행을 통해 지역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을 제안하고, 중구의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컨설팅은 중구의 일반현황과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의 실질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전시 안전정책과, 대전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중구청 재난안전과, 건강증진과, 관할 소방서와 함께 중구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4개의 사업 전략, 6개의 세부 사업(①민간기업 AED 기부 프로젝트, ②중구 안전신고 서포터즈 운영, ③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배포, ④초·중·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⑤응급처치 안전교육 이수자 확대, ⑥위기가구 발굴 협력 체계 개발 모델)을 제안하였고 중구청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일시: 2025. 9. 23. 장소: 대전광역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동구 용운국제수영장



대전시는 동구와 합동으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구 용운국제수영장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이 발생해 다중이용시설로까지 번지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훈련에는 시청 13개 협업기능부서를 비롯해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16개 기관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상황 전파, 주민 대피 및 초기 대응,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수습·복구까지 단계별로 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용운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용운국제수영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2ha의 산림과 주요 시설이 피해를 입는 등 실제 재난 수준의 훈련 시나리오가 적용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후변화로 도심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범국가적 훈련으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와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9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일시 : 2025. 9. 26. 장소 : 엑스포시민광장



대전시가 26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제9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희 시의회 의장, 설동호 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에 이어 안전문화 유공자 표창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시와 11개 공공기관이 '안전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시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이 참여하였다.

협약 선포식 이후에는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교통안전 등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이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스 투어와 안전캠페인도 이어지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안전은 가족과 이웃,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안전체험과 교육을 통해 일류 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는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협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5년 제2회 대전광역시 위험분석협의회 개최

일시 : 2025. 10. 14. 장소 : 대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대전연구원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는 14일 1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대형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회 위험분석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형화재는 다양한 사회재난 중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크고, 초기 진화와 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수 화재 진압 방식 적용 등이 요구되는 즉각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대전시에서 한국타이어 공장(2023), 현대아울렛(2022) 등 대형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시내 대형화재의 예방과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 안전정책과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도시경관과, 운송주차과, 대전소방본부, 대덕구청 담당자를 비롯하여 관련 화재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건축공간연구원 이주경 센터장(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 '물류창고 화재안전 건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으며 이어 서원대학교 박찬석 교수(소방행정학과), 충남연구원 신우리 책임연구원(재난안전연구센터),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은경 부센터장, 원광대학교 조성 교수(소방행정학과)가 참여해 공공·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형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철 안전정책과 과장은 "대형화재 대응의 핵심은 인명피해 예방에 있으며 피난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대응지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노후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실태조사와 대피훈련의 체계화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전연구원, 대전동부서와 관계성 범죄예방 정책 세미나 개최

일시 : 2025. 10. 30. 장소 : 우송대학교 우송관(W7) 4층 교수회의실



대전연구원과 대전동부경찰서는 30일 우송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기관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예방'을 주제로 공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전연구원과 대전동부경찰서는 관계성 범죄에 취약한 청년층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공동정책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대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연구원 양승희 도시안전연구센터장, 배재대 경찰학부 전용재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양문상 과장, 대전열린가족통합센터 김순란 센터장 등 4명이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 2025. 11. 13. 장소 : 대전광역시청 10층 중회의실



대전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시 재난안전정책 보고,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재난안전관리와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6기 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에 구성되었고, 공공기관, 구호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봉사단체 등 총 16명으로 이루어졌다. 임기는 2027년 2월 25일까지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전개해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등 피해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올해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재난 대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
혜택은 대전시민!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대상

'25. 1. 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25. 1. 1. 00시 ~ '25. 12. 31. 24시(매년 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가스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사회재난 상해사망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2천만원
가스 상해사망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천만원 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재증명원 발급

임시주거 및 주택복구지원

지원서비스 주요기관 안내

보험 및 의료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생활안정 지원

기타지원

» 임시주거 및 주택복구 지원

• 119 희망의 집 무상지급

지원근거: 대전 소방본부와 한빛컨테이너 업무협약(2010.2.18.)
지원업체: 한빛컨테이너
지원대상: 화재로 주거시설(단독주택)이 소실되어 생계위기에 처한 이재민
지원결정: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장이 추천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주민으로, 컨테이너 설치공간 확보된 대상 중 지원센터와 한빛컨테이너 상호 간 협의하여 지원결정
지원내용: 컨테이너하우스(18㎡), 3개월 무상지원
- 이송설치에 따른 장비 사용료: 5~10만원 실비는 자부담
- 무상지원(3개월) 이후에는 철거 및 저가임대 후 계속 사용 가능(업체협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공가 임시주거 지원

지원근거: 대전 소방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2009.3.3.)
지원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원대상: 화재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화재피해 복구 관련법에 의한 중복지원 대상 제외, 소실주택 불가능한 대상
지원내용: 한국토지공사 보유 공가 3개월 저가임대(일반 임대료의 30% 수준)
- 거주지역 및 공가의 유무에 따라 주택면적은 상이 할 수 있음

• 화재피해 주택 내·외부 복구 및 도배지원

지원근거: 대전 소방본부와 스마트화재복구공사 업무협약(2017.12.27.)
지원기관: (주)대주119(구, 스마트화재복구공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등 주택 자력복구 불가능 대상
화재피해복구 관련법에 의한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건물 내·외부 복구가 가능하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 중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지원내용: 화재주택 내·외부 건축공사, 건물내부 인테리어 및 도배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동부 270-1356 / 둔산 270-1451 / 대덕 270-1556 / 유성 270-1656 / 서부 270-1757